

유럽 방위비 급증의 경제·산업 영향

저자 : 조영무



유럽연합은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비 지출의 대규모 증액 목표를 제시했다.

- 국방비 증액 목표 달성, 시간 걸린다
- 방위비 증가시 성장률은 후행적 상승
- 유럽의 산업 정책, 우선순위 교체
- 유럽 민간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
- 기회와 리스크 모두에 대비 필요

유럽이 재무장에 나서려 하고 있다.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등 러-우 전쟁 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이 유럽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잠재적 위협국인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불안함과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고조된 셈이다.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감은 3월 4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으로 표면화됐다. 유럽연합은 이 계획을 통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에서 최대 1,500억 유로(한화 24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 회원국의 무기 구입에 빌려주는 방안(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재정준칙’의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GDP의 최대 1.5% 만큼 국방비 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향후 4년 동안 8,000억 유로(한화 1,300조 원) 이상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의 27개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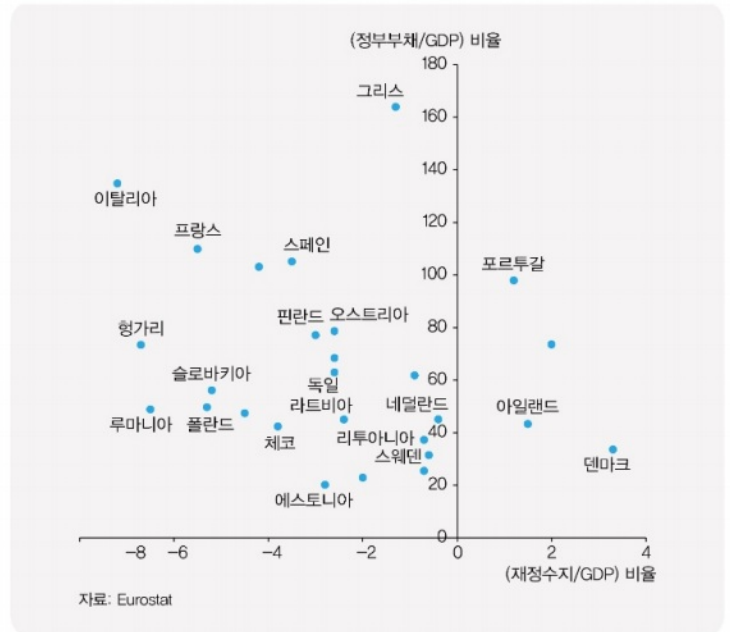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유럽은 향후 국방비 지출을 실제로 언제까지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러한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는 유럽의 경제성장, 산업, 소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럽의 재무장이 미칠 경제적·산업적 영향에 대해 예측해 본다.

국방비 증액 목표 달성, 시간 걸린다

‘유럽 재무장 계획’이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는 얻었지만, 실제 국방 예산의 수립 및 실행은 개별 회원국의 몫이고, 많은 경우 해당국 의회 승인과 같은 국내 정치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 분위기는 매우 상이하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로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내 군사 협력을 주도하고 있고, 국방비 증액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낮은 편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좌파 및 극우 정당들이 유럽 재무장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국방비 지출보다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선호한다.

경제적으로도 재정수지가 적자이고 국가부채가 많은 국가에게 국방비 지출 확대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어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방비 지출 확대가 쉽지 않고 국민들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우 전쟁 이후 국방력 확충 및 우크라이나 난민 대응 등으로 재정적자가 이미 GDP의 3%를 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유럽 각국이 향후 1~2년 내에 유럽연합이 목표한 수준까지 빠르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연합 회원국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상황 (2023년 기준, %)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향후 4년 뒤 유럽 주요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예상해 보면, 국방 전력 확충에 적극적인 독일,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연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1.5~1.7% 만큼 추가적으로 늘려, 4년 뒤 연간 국방비 지출이 GDP의 3% 이상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고 러시아와 거리가 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연간 국방비 지출 확대 규모가 GDP 대비 0.5~1%에 그쳐, 4년 뒤 연간 국방비 지출이 GDP의 2% 초중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 외 다수 국가들은 연간 국방비를 GDP 대비 1~1.5% 수준만큼 늘릴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4년 뒤 유럽연합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는 현재보다 약 2,000억 유로(한화 325조 원)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목표는 향후 4년 동안 8,000억 유로, 즉 연평균 2,000억 유로만큼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약 4년 정도가 지나서야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액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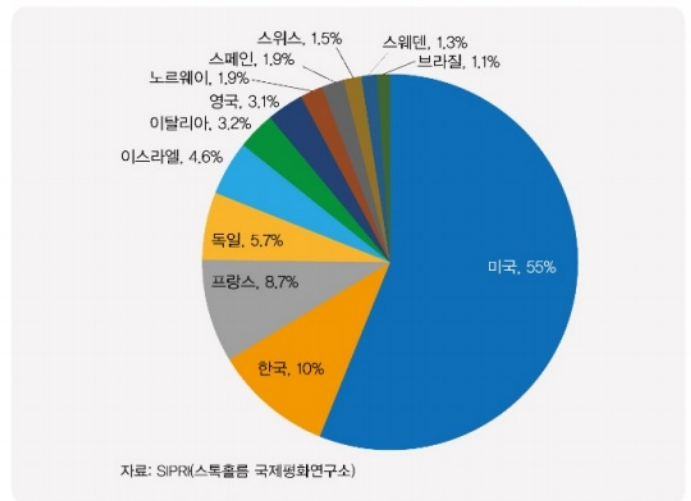
방위비 증가시 성장률은 후행적 상승

향후 국방비 지출을 늘려가는 과정의 초기에는 유럽 경제의 GDP가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액 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S&P Global 등 글로벌 리서치기관들은 유럽 국방비 지출의 '재정승수'가 초기에는 0.5 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초기에는 국방비 재정지출이 GDP의 1%만큼 늘어도 최종적인 GDP는 0.5% 내외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다른 형태의 재정 지출에 비해 승수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군사비는 소비 및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민간부문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도 나타난다. 더욱이 현재 유럽의 국방비 지출 중 약 80%가 해외로부터의 무기 수입에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럽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돼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방비 지출 증가는 국방산업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유럽 경제 성장률을 높일 전망이다. 역내 국방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고 연관산업 투자까지 늘어날 경우, 국방비 지출의 재정승수는 초기 0.5 에서 약 4년 뒤 0.8~0.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 4년 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비 지출 증가액 2,000억 유로가 유럽연합 GDP의 약 1% 수준이고, 이 때 재정승수가 0.8~0.9까지 높아진다면, 이는 국방비 지출 증액으로 경제성장률이 0.8~0.9%p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2024년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0.8~0.9%p 수준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의미 있는 변화인 셈이다.

유럽연합이 구입한 무기 중 국가별 비중 (24년 기준)



유럽의 산업 정책, 우선순위 교체

유럽연합은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조성될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자금 1,500억 유로(한화 244조 원)의 사용에 있어, 구매 가능한 무기에 ‘유럽산 부품 65% 이상’ 또는 ‘유럽 내 생산시설’ 등 제약 조건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 ‘유럽 재무장 계획 백서’(Readiness 2030)에서 방위산업을 넘어 AI, 양자컴퓨팅, 로봇,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등 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초기 단계에서 AI와 양자컴퓨팅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와 가치 사슬은 군사 및 민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 기존 산업 역시 방위산업 기반 성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기술 개발에 유럽방위기금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방비 지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 정책이 경제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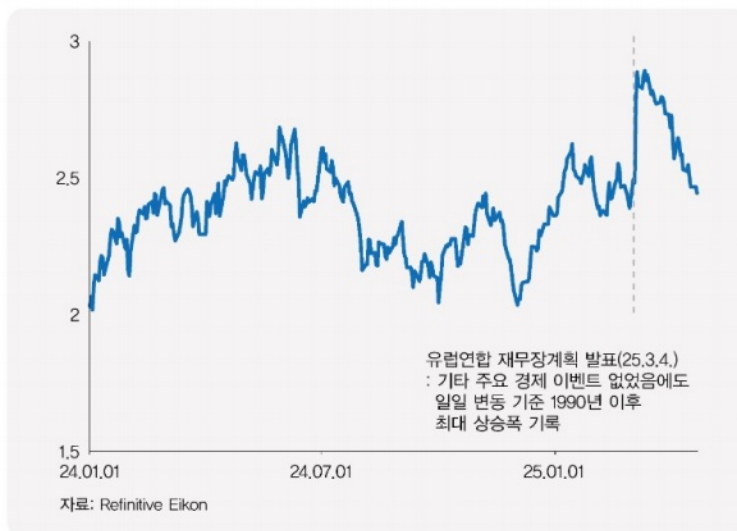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에서 강조된 EU 기반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자립, 공동 조달 및 투자, 규제 혁신 등 기조는 향후 국방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 등 여타 산업에서도 더욱 강조될 수 있다. ‘Chips Act’ 등에서 반도체, 클라우드, 통신 등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의 EU 내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Clean Industrial Deal’ 등에서도 공공조달 시 EU산 우선, 외국 보조금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은 방위산업 육성이 우선시될수록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Next Generation EU 회복탄력성기금’ 등을 통해 그린 전환에 연간 약 500억 유로(한화 81조 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6년 기금 집행이 종료되면 지원 규모가 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유럽이 국방력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유럽 민간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

향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 소비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가 국채를 추가 발행해 파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늘어나는 국방비를 충당하려 할 경우, 국채수익률 등 시중금리가 상승해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밝혔던 지난 3월 4일,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0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인한 독일의 재정지출 급증 시기 이후 가장 큰 폭(0.3%p/일)으로 급등했다.

유럽 금리(독일 10년만기 국채수익률) 추이 (%)



향후 정부가 국방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년층, 난민 대상 등 복지지출 축소 또는 가계 대상 증세를 시도할 경우에도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책에 있어서 국방이 우선시될수록 여타 분야 정부 예산의 전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세금 인상 없이’ 충당하겠다고 밝혀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가난한 회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마련했던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관련 예산의 국방비 전용을 제안한 상태다.

방위비 지출 급증 및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유럽 내 방위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취업자 증가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민간 소비 활성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해 향후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더라도 그 효과가 일부 국가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위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아 매출이 늘더라도 관련 취업자가 크게 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생산방식이 자본집약적이고 종사 인력에 요구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기회와 리스크 모두에 대비 필요

유럽이 국방 관련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늘림에 따라 경제 성장세, 산업 정책, 민간 소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은 관련 사업에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방비 지출 확대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높아지는 산업 및 정책적 육성이 추진되는 산업에서 유럽 시장에의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산업의 경우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Made in Europe’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일부 국내 방산업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 내 연관 기업과의 협업, 적정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유럽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럽 시장에 대한 기존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지출 및 연관산업 투자는 활성화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는 도리어 부진하다면, 유럽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자칫 ‘허울 좋은 잔치’로 끝날 수 있다. 정부 및 군대 대상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회 발굴이 도움이 될 수 있다.